

# 「스토킹처벌법」·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정법률은 **공포 즉시 시행**(’23년 7월)되며, 다만  
‘**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**’ 제도는 **공포 6개월 경과**  
(’24년 1월)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


경 찰 청  
KOREAN NATIONAL POLICE AGENCY





##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

▶ 단순 스토킹범죄도 **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**할 수 있도록 하여,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※ 현행법 제18조 제3항(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) 삭제







## 2

## 온라인 스토킹 처벌

- ▶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, 그간의 처벌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.

온라인 스토킹이란, △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 
개인정보,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·배포·게시  
하는 행위 △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인 것처럼  
가장하는 행위

(「**스토킹처벌법**」 제2조제1호바목·사목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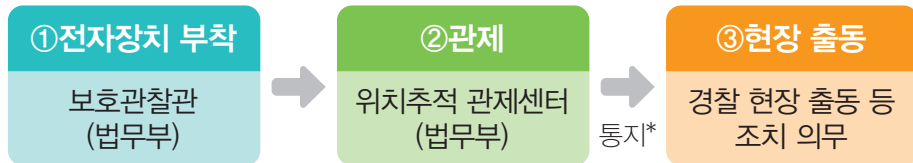


### 3

##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

- ▶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’을 신설하고, 「스토킹처벌법」 제9조제1항제3호의2·제3항·제4항 및 제5항)
- ▶ 전자장치 부착 주체를 **보호관찰관**으로 규정하였습니다. 「전자장치부착법」 제31조의6)

### 업무처리절차



\* △부착대상자가 법원 지정 일시까지 미출석·부착 거부 △접근금지 위반(우려) 및 효용 유지 의무 위반(의심상당) 시







4

##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

- ▶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에서 **형사처벌로 상향**하여  
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. (『스토킹처벌법』 제20조제3항 및 제4항)

기존	→	변경
1천만원 이하 과태료		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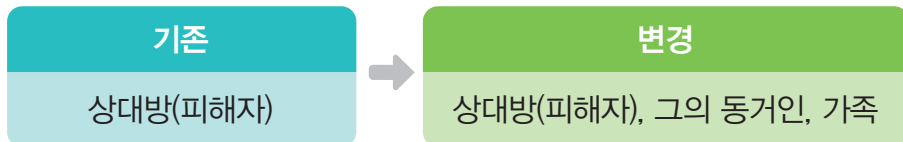


5

## 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 보호 대상, 기간 확대

- ▶ 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**스토킹 행위의 상대방(피해자), 그의 동거인, 가족까지 확대**되었습니다.

(「스토킹처벌법」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호·제3호)



- ▶ 잠정조치(2·3호·3호의2) 기간이 **기본 3개월로 연장**되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.(「스토킹처벌법」 제9조제7항)







6

##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신청권 명시

- ▶ 그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, 기간연장·변경·취소 신청 근거가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, 경찰의 신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. (『스토킹처벌법』 제11조제2항)

7

## 긴급응급·잠정조치 취소·변경·연장 시 통지·고지

- ▶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의 취소, 변경, 연장 시 피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,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.  
(『스토킹처벌법』 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)







# 8

##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

- ▶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△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△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△변호사 선임의 특례(국선변호사 제도 등)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였습니다.

(「스토킹처벌법」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17조의4)

